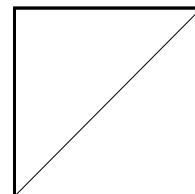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57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3. 2. (제 4 차)	

NH투자증권(주)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3. 2.

## 1. 의결주문

NH투자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## 2. 제안이유

NH투자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○○○○○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‘부당권유 금지 위반’, ‘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’, ‘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’ 등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에 대하여 NH투자증권(주)에 대해 ‘업무의 일부 정지(6월)’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(붙임)

- 「舊자본시장법」 제47조(설명의무) 제2항
- 「舊자본시장법」 제49조(부당권유의 금지) 제2호
- 「舊자본시장법」 제57조(투자광고) 제6항
- 「자본시장법」 제249조의5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 제1호
- 「舊자본시장법」 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 제3항

「舊자본시장법」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1호 및 제25의2호

- 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2조(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)  
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3조(설명의무) 제2항  
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0조(투자광고) 제3항 제6호  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271조의6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 제1항  
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별표22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2조(투자광고의 방법·절차) 제1항 제3호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 
제1항, 제3항, 별표3, 별표6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 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  
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## 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(2021.3.25.) 심의필
-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(2021.12.1.) 심의필
- 제1차('22.1.6), 임시 제1차(1.14), 제2차 임시(1.25), 제3차(2.10),  
제4차(2.24), 제4차 임시(3.2.) 안전검토 소위원회 심의필

<별지>

NH투자증권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□ 기관에 대한 조치

#### ○ 업무의 일부\* 정지 6월 및 과태료 5,716백만원 부과\*\*

\*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(사모펀드 신규판매)

\*\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(업무의 일부정지 6월) : 부당권유 금지 위반
- 조치사유(과태료) :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
- 법적근거 : 「(舊)자본시장법」 제47조 제2항, 제49조 제2호, 제57조 제6항, 제249조의5, 제420조 제3항 및 제449조 제1항, 「(舊)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2조, 제53조 제2항, 제60조 제3항, 제271조의6 제1항, 제390조 및 [별표22]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2조 제1항,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 및 제3항, [별표3] 및 [별표6]

## II. 조치사유

### 1. 부당권유 금지 위반

-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- NH투자증권은 20xx.x.xx~20xx.x.xx. 기간 중 ○○○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(이하 '○○○○펀드')를 △△회차에 걸쳐 투자자 ▽▽ ▽▽명(▲▲▲▲건, 투자금액 ▼▼▼▼억원)에게 판매하면서,
  - ○○○○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,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매출채권에만(95%이상) 투자하는 것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

### 2.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
-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,
-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△억원(▽건)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○○○○펀드를 판매하면서,
  -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,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### 3.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

-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,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,
- NH투자증권은 55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없이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(3,000명 이상)에게 ○○○○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

(붙임)

## 관계 법규

### □ (舊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47조(설명의무)** (2021.3.24. 삭제)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9조(부당권유의 금지)** (2021.3.24. 삭제)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1.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
2.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
**제57조(투자광고)** (2021.3.24. 삭제)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249조의5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**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

**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**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2. 신탁계약,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
3.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

4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5. 기관경고
6. 기관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[별표1]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·변경 명령의 사유

48.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
(2021.3.24. 삭제)

**제449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1. 제47조제2항(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(2021.3.24. 삭제)
- 25의2. 제57조제6항(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(2021.3.24. 삭제)

□ (舊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52조(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)** (2021.3.23. 삭제) 법 제4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
1.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
2. 우편
3. 전화자동응답시스템

**제53조(설명의무)** (2021.3.23. 삭제)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(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구조와 성격
2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
3.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
4.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
**제60조(투자광고)** (2021.3.23. 삭제)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

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3. 준법감시인(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)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

**제271조의6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**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"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(투자자 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)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.

**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**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시행령 제390조 관련)**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타. 법 제47조제2항(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(2021.3.23. 삭제)	법 제449조 제1항제21호	6,000
버. 법 제57조제6항(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(2021.3.23. 삭제)	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	10,000

□ 금융투자업규정

**제4-12조(투자광고의 방법·절차)**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.

1.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

2.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순자본비율, 영업용순자본비율, 최소영업자본액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
3.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
4.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
5.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
6.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

## 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**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**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3.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(1), (2)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##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
### 3. 예정금액의 산정

-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동 기** 위반결과*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\* 중대 :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, 금융기관 손실초래, 건전금융질서 저해

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경미 :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

\*\* 상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중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

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### <별표6>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

###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예정비율은 <별표3>에 따른다)

나.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제2항, 제449조제1항제21호,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(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, 준용규정 포함)

(1) 위반건수 : 확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계약 건수

(2) 위반결과의 판단 : 위반한 계약 건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
1) 중 대 :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

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3) 경 미 : 판매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

※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% 적용

#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**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**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**제17조(과태료의 부과)**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**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**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  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  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  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  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-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**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15